



주간통일정세 2011-25(2011.06.013~06.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 中 조직부장 접견... "서로 배우고 교류" (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라며 "조(북)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한다"고 강조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대화가 잘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 리 조직부장은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이번 중국 방문기간 중조 최고영도자 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
 - 이날 접견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
 - 오찬에는 북측의 회담 배석자와 함께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
 - 리 조직부장은 오찬을 마치고 이날 귀환했으며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했으며, 방북 기간 백두산을 방문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내달 24일 지방의회 대의원선거(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다음달 24일 전국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13일 발표 내용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24일에 실시된다"고 전함.
-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역의회격인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과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각각 4년으로 지방인민회의는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예산과 각 지역의 법집행 대책을 마련하며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 **北양형섭 "6·15공동선언 이행운동 대중화"(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을 보다 적극화·대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양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그날까지 추켜들고 나가야 할 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과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핵포기를 운운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특대형 도발행위까지 감행해 온 민족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촉발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한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
- 이날 보고회에는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매체들 '6·15선언 11돌' 부각 주력(6/15,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대강(大綱)'으로 평가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업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매체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자주통일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사실을 통해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전체 조선민족 앞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천안)합선침몰사건 등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하고 그를 기회로 도발적인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는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없다"며 "분연히 떨쳐 일어나 리명박 패당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함.
- 또한 '우리민족끼리는' 논설을 통해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할 것을 확약한 자주통일대강"이라며 민족의 단합을 촉구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위원들의 입을 빌리는 대담 형식으로 6·15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
- 중앙방송에 출연한 이들 위원은 "이명박 역적패당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우리를 해치기 위한 각종 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무슨 급변사태를 떠벌이며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함부로 건드리는 용납 못 할 대역죄까지 저질러대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
- 대외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6·15선언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얀마와 노르웨이, 네팔의 친선단체 관계자의 코멘트를 전함.

● "北 '통전부 대신 외무성이 한국 담당할 것"(6/15, 산케이신문)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11년부터 조선노동당 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대신 외무성이 한국과 일본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익명의 '교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계관 제1부상은 지난해 12월에 방북한 한 미국인에게 "공화국(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앞두고 내년(2011년)에 외교정책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함.
- 김계관은 한국, 일본을 통전부 대신 외무성이 맡게 될 것이고, 자신이 적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대한 정책을) 대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지만, 이 방침을 바꾸고 앞으로는 별개로 대응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함.
- 신문은 또 북한 외무성이 일본 총리를 지낸 자민당의 한 인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북일 교섭 공작을 벌였다고 전함.
- 산케이신문은 또 '한미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리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지난해 11월에 방북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관계자에게 "



우리(북한)는 소형화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소형화한 핵무기를) 운반하는 기술도 이미 개발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함.

● 北 "대북방송 지원은 악랄한 심리모략전"(6/1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정부의 민간 대북방송 지원 방침을 악랄한 반(反)북 심리모략전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악랄하게 감행되는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보수패당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민간 대북방송들에게 주파수를 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들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적극 써먹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민간 대북방송들은 해외에서 전파를 날려 공화국의 존엄 높은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미화분식하는 모략 선전을 벌여왔다"며 "북남관계가 총체적 파국에 처하고 극도의 전쟁 위험이 조성된 것은 심리모략전 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어온 역적패당의 망동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남측을 비난
- 신문은 또 "북과 남 사이에 참여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때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임의의 도발소동도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北, 독일대사에 리시홍 임명(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신임 독일 주재 대사에 리시홍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도이칠란트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리시홍이 임명됐다"고 밝힘.
- 리 대사의 이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2003년 6월 영국 주재 대리대사 자격으로 영국의 기독교계 인권옹호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의 서한을 접수하기도 했던 만큼 주로 외무성에서 유럽 담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임.

● 北 지방의원선거 앞두고 중앙선거촉 조직(6/19,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24일 전국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 서기장은 변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이 각각 맡음.
- 중앙선거위원으로는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



년동맹 제1비서,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농업근로자 동맹 위원장, 로성실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김영호 내각 사무국장이 임명

- 앞서 북한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24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6.13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및 오찬 마련(6/13, 중통·중방)
 - 김정일,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장성택, 김영일, 김양건 참가
- 김정일, "경제선동대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동예술선동대원 등에 「감사」 전달(6/16, 중방)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7,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일(黨 비서), 6.15 이탈리아 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국제부장 '알폰소 갈디' 일행과 담화(6/15, 중통·평방)
- 박익춘 외무상 6.15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6/15,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제56호'(6.18),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 조직(6/19, 중방·중통)
 - 양형섭, 부위원장 : 최룡해, 서기장 : 변영립, 위원 : 리명수·리웅철·현상주·리명길·노성실·김영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독일 北대사 리시홍 임명(6/18, 중방·중통)

나. 경제

● "회항 北선박에 미얀마행 미사일 적재 추정"(6/13, 연합뉴스)

- 지난달 말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은 중미국가인 벨리즈 소속의 라이트(M/V Light) 호이며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연합뉴스



-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케이스는 지난 2009년 강남호 회항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말함.
- 세이모어 조정관은 "라이트호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싣고 미안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미안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해당 선박이 기항할 경우 검색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그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압력과 관심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박 회항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
 - 그는 "북한이 미안마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미안마 정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과거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또 다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
 - 그는 특히 "추가도발은 현재 3대 세습 구도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도발보다는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집중하는 편이 나올 것이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 이어 그는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재 철회는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어디까지나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거듭 강조
 -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라고 설명
- "1987~2009년 北탄도미사일 수출 510건"(6/13, 연합뉴스)
- 미국의 군비통제 및 비확산전문가인 조슈아 폴락은 13일 "북한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0건의 탄도미사일 수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폴락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히otel에서 개막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핵과 원자력의 미래' 플래넘 세미나 자료에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례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수출 건수를 소개



- 미사일 수출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수출건수가 420건으로 82%를 차지하고 1994년~2000년 30건, 2001년~2009년 60건을 각각 기록
- 폴락은 특히 "북한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예멘 등 최소 7개국에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주장
- 그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미사일 거래의 '갈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北나진항 2호 부두 스위스에 임대(6/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나진항 1·3호 부두에 대한 사용권을 각각 중국과 러시아가 갖게 된 가운데 2호 부두는 스위스에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경제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14일 북한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온 나진항 2호 부두가 스위스에 임대됐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나진항 1호 부두는 중국, 2호는 스위스, 3호는 러시아에 임대됐고 4~6호 부두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북한과 유럽 연합(EU) 국가·기업들 간에 경제관련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함.
- 북한과 스위스는 정기적인 정치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에도 비트 노브스(Beat Nobs) 국무부 비서를 비롯한 외무성 대표단이 지난 2009년에 이어 평양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국은 지난해 3월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나진항뿐 아니라 최근 착공식을 한 황금평 경제특구에도 EU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평양주민에도 보름에 닷새만 배급"(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비교적 배급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마저도 최근에는 보름에 닷새만 배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중국에 나와 있는 평양 주민이 전화 통화에서 5월 들어 배급이 줄면서 웬만한 간부 집들도 강냉이 죽을 먹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평양 주민은 RFA에 "화폐개혁 이후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양의 장마당(시장)에서는 북한돈이 휴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물가를 잡는다고 국가에서 화폐교환을 하더니 결국 인민들만 잡게 생겼다"고 말함.
- 이 주민은 또 "현재 평양 송신 장마당에서 1kg당 쌀은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강냉이는 1천200원, 국수는 1천원 선을 넘었다"면서 "화폐개혁 이전보다 쌀 가격이 꼭 배로 뛰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RFA는 북한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2천원 정도 임을 감안할 때 한 달 임금으로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설명
- RFA는 "이 주민이 농촌동원기간에 전기와 물이 부족해 난리였다며 '평양사람이 잘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임.

● "中, 대북식량지원 급감"(6/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의 대북식량지원이 2005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된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t 이상이었지만, 2006년 25만t 정도로 줄었고, 2007년 30만t을 약간 웃돌았으나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0만t 정도로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식량 수출도 급감했다면서, 이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소규모 식량 제공은 중국 당국의 의도된 대북정책 탓이라고 지적
- 이어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분배 감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 "對中 광물 대량수출로 北산업 황폐화 우려"(6/15, 연합뉴스)

- 북한이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이후 대(對)중국 교역을 늘리면서 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을 대량 수출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내대니얼 애든 미국 로런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영문 저널 최신호(2011년 여름)에 실린 '중국해관총서(관세청) 통계로 본 북한의 대중교역:1995~2009년 에너지·광물교역 동향과 시사점'이란 논문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해가면 북한은 군수부문 외 다른 산업의 황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애든 연구원은 2009년도 북중교역액이 미국의 대북지원액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으나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막대한 양의 주요 광물을 수출하는 데다 교역 방식도 '우호가격'이란 명분으로 싸게 팔고 공산품, 식량 등은 비싸게 들여오는 '불공정 바터무역'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 애든 연구원은 또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대중적자 누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음.

● 1분기 北-EU 교역 급감...전년比 29% 그쳐(6/15,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
- VOA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교역 통계를 인용, 올해 1분기 북한과 EU간 교역액이 2천400만 유로(3천463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8천100만 유로의 29.6%에 불과했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의 작년 1분기 EU 수출액이 네덜란드에 수출된 석유제품 5천 500만 유로를 포함해 7천100만 유로였지만 올해 1분기 수출액은 5천 700만 유로 줄어든 1천400만 유로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
- 방송은 또 작년 한해 북한의 대(對)EU 교역액은 수출 1억49만 유로를 포함해 1억7천440만 유로(2억5천만 달러)였고 전체 수출의 56%인 5천870만 유로가 석유 같은 광물성 연료였다고 밝힘.

● **중단중기업, 北전람회서 80만 달러 주문받아(6/16, 요녕조선문보)**

- 지난달 북한에서 열린 '제1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중국 단둥(丹東)의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80만 달러(1억3천만 원) 규모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고 요녕조선문보가 16일 보도
- 신문은 단둥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을 인용,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단둥의 공작기계와 에너지, 전기기계 설비, 화공 업체들이 북한 측의 주문을 받아 8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신문은 이번 전람회에 20여 개 국가에서 28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나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의주와 인접해 북·중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서는 4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소개

● **'대북식량지원금지' 美하원 1차 관문 통과(6/16,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
-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 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협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
- 이어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고 지적
- 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

● "UNICEF, 北주민 32만 명에 긴급영양지원"(6/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조만간 북한주민 32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영양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에 따르면 UNICEF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지원받은 예산 110여만 달러로 북한 양강도와 함경도, 강원도 등 4개 도의 주민 32만4천500명에게 영양보충제와 식품보조제 등을 지원할 예정
- 지원 대상에는 임신부 9만4천명과 수유모 4만7천명을 비롯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천500여명이 포함되며, 또 설사병에 걸려 고통받는 5살 미만의 어린이 4만7천명을 치료할 예정

다. 군사

● 北,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맹비난(6/1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16일 우리 군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맹비난하며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도발적 정체가 비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괴뢰들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서해의 5개 섬 일대는 쌍방 사이에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돼 있는 가장 예민한 수역"이라며 "전쟁광신자들은 해안방어를 기본목적으로 했던 해병대를 침투와 상륙, 육해공군의 해상 및 공중수송과 타격지원 밑에 가지가지의 협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침략적이며 도발성이 짙은 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해온 것"이라고 비난
- 이어 "문제의 심각성은 괴뢰호전광들이 이 같은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조작놀음을 6·15날에 벌여놓은 데 있다"며 "괴뢰호전광들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6·15날에 창설식이라는 것을 벌여 6·15공동선언을 희석시키고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책동을 감행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전쟁광신자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오직 총대로만 통하는 법"이라며 "괴뢰호전광들이 지금처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이요 뭐요 하며 침략전쟁책동에 광분하다가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라. 사회·문화

● 北·中, 압록강 첫 공동순찰팀 가동(6/16, 신화통신)

-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에서 첫 공동 순찰팀을 가동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
- 통신은 15일 중국에서 3척, 북한에서 2척의 선박을 제공한 가운데 공동 순찰팀이 정식 출범했다고 확인
- 이는 압록강을 접경으로 한 단둥(丹東)과 평안북도 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압록강 공동 순찰팀을 출범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을 앞둔 사전 준비작업 차원이라는 관측
- 이어 통신은 지난 4월 북한-중국 해사당국 간에 압록강 관리에 대한 협력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 北·中 탈북자 단속강화.. 연변서 14명 검거(6/16, 연합뉴스; 연변조건; 환구시보)

- 지난 3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6명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북한과 중국이 변경지역 경계와 탈북자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 연변에서 탈북자 14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가 보도
- 허룽시 공안국은 허룽에서 활동하던 탈북 조직을 적발, 수사를 확대해 두만강 상류를 통해 밀입국한 뒤 허룽(和龍)과 옌지(延吉)에서 숨어 지내던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변 현지 매체인 연변조건도 지난 10일 "허룽시 공안국이 한 건의 비법 월경조직사건을 해결하고 비법 월경해 허룽과 옌지의 주민 집에 숨어있던 14명의 경외 인원을 검거했다"고 보도
- 신문은 '탈북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허룽이 북한 접경지역이며, 중국 언론이 통상 탈북자를 '비법 월경한 경외 인원'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체포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연변 소식통들은 전함.
- 환구시보는 15일 북·중 접경지역 경계 강화 상황을 소개한 르포 기사를 통해 "연변 룡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 주민과 공안당국이 탈북자 검거를 위한 '민-경 공조 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창바이(長白)현 접경지역에서는 중국은 물론 북한도 100m 간격으로 초병을 세워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고 전함.

● "北여성 태권도선수단도 美공연 추진"(6/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여성선수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선수단의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 대표를 인용해 "여자선수들 주축으로 (태권도)팀을 구성하고 남자선수 1~2명과 청소년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현재는 (미국 공연을)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RFA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할 북한의 여성 태권도선수단에는 현재 '북한 미녀 태권도선수단'이라는 가칭이 붙어 있는데, 실제 '미녀선수단'이란 명칭으로 공연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여성선수들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 **"北 휴대전화 사용자 50만 돌파...인기 '쑹쑹'(6/17,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 새로운 휴대전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증가해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휴대전화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2011년 1분기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북한의 체신성과 합작해 세운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53만5천133명임.
- 오라스콤 텔레콤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MMS)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설명
-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주민 박모씨를 인용, "평양시민 사이에는 '손전화(휴대전화) 없는 사람은 개하고 나뉘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며 "간부들은 물론 일반 시민도 폰돈을 쪼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양의 분위기를 전함.
- 박씨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늘면서 최근에는 기본제공 통화량으로는 부족해 추가로 선불카드를 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함.
- 북한에서는 한 달 휴대전화 기본요금인 월 2천850원(암시장 환율 적용 시 미화 1달러)에 통화 200분, 문자 20개가 제공되지만 통화량 초과시 발신이 끊기는데 이런 경우 체신국에서 파는 1~4유로짜리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
- 이 선불카드는 오라스콤이 최근 출시한 '유로팩'(Euro Packs)으로, 북한 돈이 아닌 유로화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오라스콤 측은 "유로화 수입을 늘리려고 시작한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2. 대외정세

가. 일반

● **중공산당 조직부장 방북 마치고 귀환(6/13, 조선중앙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朝)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은 체류기간 만경대를 방문하고 백두산 지구를 참관했다"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조직부장은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

● <인터뷰> 벨 前사령관 "北도발은 협상유인 목적"(6/13, 연합뉴스)

- 버웰 벨 전(前) 주한 미군사령관은 13일 "북한의 도발은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경제·안보·외교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반도 안보에서 중국이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중국은 최악의 전략을 택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상 유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중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성을 인식하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가져왔다."라고 답함.
- 또한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인 '개념계획 5029'에 대해선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언제라도 내부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경우 효과적인 군사계획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념계획 5029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北 조만간 도발 행위 벌일 수도"(6/14, 산케이신문)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포럼의 랄프 A. 코사 소장이 '북한의 조만간 도발행위를 벌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코사 소장은 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 당국자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북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며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 다른 핵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
- 코사 소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게 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더라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이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北 미사일 대응 놓고 美·日 고심"(6/16, 위키리크스)

-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식을 고심했다는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
- 위키리크스가 15일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 대사관의 제임스 줌월트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3월 12일 주일 미군 부총사령관과 함께 일본 외무성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북미국장, 다카미자와 시게노부(高見澤將林)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을 만나 양국 협력과 정보 공유, 언론 대응 방식 조율 등의 문제를 논의
- 다카미자와 국장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체를 요격할 법적인 권한과 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겨냥해 피해를 입힐 경우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주일 미군 부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이 발사할 물체가 대포동 2호이거나 우주비행물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은 아닐 것"이라며 일본의 요격 계획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
- 그러면서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함정이 아니라 주일 패트리엇 포대가 파편을 처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
-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혹시 언론에 노출됐을 경우 양국 간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로 포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전문은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韓·日 6자회담 수석대표 "남북대화가 우선"(6/14,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함.
-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우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본부장은 1시간30분 동안 스기야마 국장을 만남.
- 북한이 최근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3국 공조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中·러 정상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6/17,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은 16일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필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
 - 양국 정상은 또 북핵문제는 외교적 수단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줄일 것을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의 차원에서 촉구

3. 대남정세

- **통일부 당국자 "베를린제안 거둬들인 적 없다"(6/13,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베를린 제안에 대해 "우리가 거둬들인 적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 상황에서 베를린 제안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함.
 - 이 같은 답변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 하겠다'는 베를린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시인·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돼 있다"고 강조
- **北주민 또 남하..9명 서해로 귀순(6/15, 연합뉴스)**
 -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서해 우도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상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들은 남자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 여자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 등이며 일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이번 귀순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 악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주민 즉시 송환 않으면 남북관계 악영향"(6/16, 연합뉴스)**
 - 북측이 지난 11일 귀순한 북한 주민 9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1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



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힘.

- 북측의 전통문은 이날 낮 12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접수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귀순의사니 뭐니 하면서 즉시 돌려 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했다고 전함.

● 정부 "자유 의사 따라 처리"..北에 통지(6/17, 연합뉴스)

- 정부는 북측이 귀순자 9명의 송환을 요구해온 데 대해 이날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전통문에는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북한 주민 9명은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

● 北 "금강산 재산정리...30일까지 들어오라"(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 법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힘.
- 북한은 이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통보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힘.

● 현대아산 "내부협의 거쳐 대응방침 결정"(6/17, 연합뉴스)

- 현대아산은 17일 북한이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내부 협의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현대아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북측으로부터 관련 통지문을 받았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도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함.
- 현대아산은 금강산특구 내에 있는 해금강 호텔과 옥류관 식당, 부두, 출입국사무소, 관광도로, 주유소, 발전기, 상수도시설, 통신망 등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통일부 당국자 "베를린제안 거둬들인 적 없다"(6/13)

-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베를린 제안에 대해 "우리가 거둬들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 상황에서 베를린 제안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이 같은 답변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베를린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시인·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북한이 상충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최근 행동까지 이상하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김국방 "北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성공 판단"(6/13)

- 김관진 국방장관은 13일 북한 핵무기와 관련,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못 받아서 단언은 못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AP 통신이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제2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존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무수단리 기지보다 더 크고 정교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 그는 만약의 사태시 우리의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핵탄두 장착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2주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



사한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발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韓日 6자회담 수석대표 "남북대화가 우선"(6/14)

-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우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본부장은 1시간30분 동안 스기야마 국장을 만났음.
- 북한이 최근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3국 공조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당국자 "천안함·연평도, 남북核회담과 분리"(6/19)

-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분리하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낸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도 이로 인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추진하는 비핵화 논의 재개과정에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관계자는 19일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남북 간에 비핵화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있으면 (남북 비핵화 회담과 6자회담 재개 과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비핵화 논의는 그것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그런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남북 비핵화 회담과는 분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재개과정을 사실상 분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의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 아니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정부 내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인 남북 비핵화 회담에



- 앞서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대두 해왔음.
- 그러나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달 초 천안함·연평도 사과요구를 문제 삼아 남북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미·중을 중심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외교적 모색이 시작됨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 발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24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한·미 양국 내부에서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한 뒤 곧바로 북미 접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촉진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받는 것"이라면서 "남북대화가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의 협상패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태권도 뉴욕에 첫선..관중 기립박수>(6/13)

- 미국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인 북한 태권도가 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음. 지난 11일(현지시각) 보스턴 인근의 로웰에서 미국 동부 지역 시범 공연을 시작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단장 배능만)은 12일 미국의 중심부인 뉴욕 인근 플라싱의 퀸즈칼리지 모리스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관중석을 가득 메운 미국과 교민들 앞에서 두 번째 공연을 했음.
- 주최 측은 이날 800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으며 좌석에 앉지 못한 관중은 체육관 바닥에서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음. 북한 시범단은 북한 국기인 인공기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체육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기본 동작, 송판·벽돌 격파, 대련, 호신술 등의 시범을 펼쳤고 관중은 두꺼운 송판이 깨져 날아가고 벽돌이 무너져 내릴 때면 "오 마이 갓(Oh My God, 맘소사)"과 "와우(Wow, 와)" 등 감탄사를 연발하며 우렁찬 박수를 보냈음.
- 특히 북한 시범단 중 2명의 여성 선수들이 격파하거나 호신술 시범에서 괴한 역할을 한 남자 선수들을 주먹과 발로 제압할 때는 탄성과 함께 체육관이 울릴 정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음.
- 시범단은 또 관중석에 있는 미국 여성 1명을 공연장으로 데리고 나와 여자 친구와 데이트 중인 남자 친구가 치한으로부터 여자 친구를 구해내는 시범에 참여시켰고 관중이 손뼉을 칠 때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하는 등 관중과 함께하는 공연을 보여줬음.
- 공연이 끝나자 관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공연장으로 내려와 함께 선수



- 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선수들이 격파한 송판 등에 사인을 부탁했음. 북한 선수들은 관중의 요구에 응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음.
- 북한 선수들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지만, 공연장을 빠져나가면서 뉴욕 공연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배능만 단장은 공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뉴욕에 와서 조선의 정통 태권도를 보여주는 마음이 정말 기쁘다"며 "미국에 있는 모든 태권도인과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음. 배 단장은 이어 "조선 민족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태권도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이날 공연장에는 미국 CNN, 일본 NTV 등 다른 국가의 언론사들도 모습을 보여 뉴욕에서 펼쳐진 북한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음.
 - 뉴욕 공연을 끝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13일 뉴욕시 관광을 하고 14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델라웨어 밸리에서 마지막 공연을 한 뒤 16일 시카고와 베이징(北京)을 거쳐 평양으로 귀국할 예정임.

● '대북식량지원금지' 美하원 1차 관문 통과(6/16)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음.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했음.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 중이며, 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인 김덕홍씨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김정일이 지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은 항상 거짓말을 할 것"이라면서 "식량지원은 억압적인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부족한 자원을 군부로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北여성 태권도선수단도 美공연 추진"(6/17)

- 여성선수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선수단의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RFA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 대표를 인용해 "여자선수를 주축으로 (태권도)팀을 구성하고 남자선수 1~2명과 청소년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현재는 (미국 공연을)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RFA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할 북한의 여성 태권도선수단에는 현재 '북한 미녀 태권도선수단'이라는 가칭이 붙어 있는데, 실제 '미녀선수단'이란 명칭으로 공연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여성선수들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6일까지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 시범공연을 하고 귀국했다. 배능만 단장은 공연을 마친 뒤 "앞으로 우리 조선과 미국의 체육인들이 교류를 더 많이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김정일, 中조직부장 접견... "서로 배우고 교류"(6/13)

- 8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朝)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라며 "조(북)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대화가 잘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 리 조직부장은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이번 중국 방문기간 중조 최고영도자 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 이날 접견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했다.
- 김 위원장은 접견에 이어 중국 대표단을 위한 오찬을 개최했다고 중앙통



신이 밝혔음. 오찬에는 북측의 회담 배석자와 함께 중국 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쑤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리시(李希) 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했음.

- 리 조직부장은 오찬을 마치고 이날 귀환했으며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했음. 또 방북 기간 백두산을 방문하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민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했음.

● "中, 대북식량지원 급감"(6/15)

- 중국의 대북식량지원이 2005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된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계획과 중국 해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음.
-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5년 50만t 이상이었지만, 2006년 25만t 정도로 줄었고, 2007년 30만t을 약간 웃돌았으나 다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0만t 정도로 줄었음.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식량 수출도 급감했다면서, 이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소규모 식량 제공은 중국 당국의 의도된 대북정책 탓이라고 지적했음.
- 하지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석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분배 감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中 탈북자 단속강화..연변서 14명 검거(6/16)

- 지난 3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6명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이후 북한과 중국이 변경지역 경계와 탈북자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 연변에서 탈북자 14명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연변(延邊)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지난달 말 탈북자 14명을 검거했음. 중국에서 한꺼번에 14명에 달하는 대규모 탈북자가 검거된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처음임.
- 허룽시 공안국은 허룽에서 활동하던 탈북 조직을 적발, 수사를 확대해 두만강 상류를 통해 밀입국한 뒤 허룽(和龍)과 옌지(延吉)에서 숨어 지내던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변 현지 매체인 연변조간도 지난 10일 "허룽시 공안국이 한 건의 비법 월경조직사건을 해결하고 비법 월경해 허룽과 옌지의 주민 집에 숨어있던 14명의 경외 인원을 검거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탈북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허룽이 북한 접경지역이며, 중국 언론이 통상 탈북자를 '비법 월경한 경외 인원'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체포된 사람들이 탈북



-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연변 소식통들은 전했다.
- 허룽 일대는 북한 무산이나 회령과 인접해 있는 데다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두만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대표적인 탈북 루트로 지목돼왔음. 북한과 중국은 지난 3월 탈북자 6명과 조선족 3명이 다롄에서 어선을 이용, 한국에 밀입국한 뒤 북·중 변경지역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북한 평안북도와 중국 단둥(丹東)시가 압록강 공동 순찰팀을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음. 5척의 선박을 이용, 압록강 유역 경계를 맡게 될 이 순찰팀은 북·중간 밀무역과 탈북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연변인터넷방송도 최근 "해외 비정부조직의 자금 지원을 받는 불법 입국 사건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연변주 공안국이 이달 초부터 불법 입국자를 제3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음.
- 환구시보는 15일 북·중 접경지역 경계 강화 상황을 소개한 르포 기사를 통해 "연변 룡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 주민과 공안당국이 탈북자 검거를 위한 '민-경 공조 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창바이(長白)현 접경지역에서는 중국은 물론 북한도 100m 간격으로 초병을 세워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중 접경지역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감시 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됐다고 전했다.
- 중국의 소식통들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롄 밀입국 사건 이후 중국 공안과 변경부대가 접경지역 경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옌지와 단둥, 허룽 등 변경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北·中, 압록강 첫 공동순찰팀 가동(6/16)

-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에서 첫 공동 순찰팀을 가동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음. 통신은 15일 중국에서 3척, 북한에서 2척의 선박을 제공한 가운데 공동 순찰팀이 정식 출범했다고 확인했음. 이는 압록강을 접경으로 한 단둥(丹東)과 평안북도 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통신은 압록강 공동 순찰팀을 출범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을 앞둔 사전 준비작업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압록강 경계경비 강화로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중 밀무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탈북자 검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신화통신은 지난 4월 북한-중국 해사당국 간에 압록강 관리에 대한 협력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中단둥기업, 北전람회서 80만 달러 주문받아(6/16)

- 지난달 북한에서 열린 '제1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중



- 국 단둥(丹東)의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80만 달러(1억3천만 원) 규모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고 요녕조선문보가 16일 보도했음.
- 신문은 단둥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을 인용, 이번 전람회 참가한 단둥의 공작기계와 에너지, 전기기계 설비, 화공 업체들이 북한 측의 주목을 받아 8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전체 납품 계약 체결액은 확인되지 않았음.
 - 신문은 이번 전람회에 20여 개 국가에서 28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나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100여 개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의주와 인접해 북·중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에서는 4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소개했음.
 - 중국은 올해 북·경 경협 강화를 위해 국제무역촉진회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성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기업들의 평양 전람회 참가를 독려했음. 이 전람회는 1996년 국내용으로 시작돼 2000년부터 외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봄철(5월)과 가을철(10월) 2차례씩 열리고 있음.
 -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시리아, 오스트리아,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폴란드, 대만 등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6-19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됐음.
- "北 황금평 개발, 영토 공고화 의도" <中매체> (6/19)
- 북한이 황금평 개발에 의욕적인 이유는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압록강 일대 섬들에 대한 영토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중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음.
 -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은 최근호에서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위화도와 황금평을 50년간 단둥(丹東)시에 임대하기로 북·중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일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했다고 소개했음.
 - 이 잡지는 황금평 공동개발은 홍콩의 신형지(新恒基) 그룹 등 민영기업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80%를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도 전했다.
 - 북한이 중국과의 황금평 공동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와 관련, 이 매체는 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張連奎 <王+鬼>) 교수를 인용,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음.
 - 장 교수는 "압록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황금평은 북한의 지속적인 확장 작업으로 중국과는 맞붙었지만 북한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마치 압록강이 북한의 '내륙 하천(內河)' 처럼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북·중은 압록강에 퇴적물이 쌓여 새롭게 형성되는 섬의 영토권을 쌍방 간 협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으나 지금과 같은 지형이라면 황금평



- 부근에 새로 생기는 섬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장 교수는 "개발을 위해 제방 등 수리시설이 보강되면 장마철마다 홍수가 발생하는 황금평이 침식돼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은 이런 황금평을 국경으로 삼아 모든 압록강 신생 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금평 공동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이 비록 외자 유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수시로 정책과 태도를 바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설 중국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황금평·라선 공동개발로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삼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관'이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개혁개방'을 수정주의 혹은 제국주의가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음모로 규정하며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중국 매체들과는 달리 북한 매체들이 개혁개방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음. 장 교수는 "북한이 적당한 시기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기 타

● "北선박, 미사일관련 무기 신고 미안마가다 회항"(6/13)

- 지난달 말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은 중미국가인 벨리즈 소속의 라이트(M/V Light) 호이며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신고 미안마로 향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음.
-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케이스는 지난 2009년 강남호 회항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말했음.
- 세이모어 조정관은 "라이트호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신고 미안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미안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해당 선박이 기항할 경우 검색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미 해군도 향해 중인 북한 선박에 행선지와 선적 물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그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압력과 관심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박 회항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안마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미안마 정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과거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또 다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특히 "추가도발은 현재 3대 세습 구도의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도발보다는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집중하는 편이 나올 것이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재 철회는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어디까지나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음.
-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 세이모어 조정관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미 정부 모두가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 내 여론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1분기 北-EU 교역 급감...전년비 29% 그쳐(6/15)

- 올해 1분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음. VOA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교역 통계를 인용, 올해 1분기 북한과 EU간 교역액이 2천400만 유로(3천463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8천100만 유로의 29.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 이는 북한의 작년 1분기 EU 수출액이 네덜란드에 수출된 석유제품 5천 500만 유로를 포함해 7천100만 유로였지만 올해 1분기 수출액은 5천 700만 유로 줄어든 1천400만 유로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 北주민 또 남하..9명 서해로 귀순(6/15)

-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서해 우도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상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이들은 남자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 여자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 등이며 일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 합참, 기무사 등



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들 주민의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주민은 손을 흔들면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경계 부대에서 선박을 육지에 대도록 했다"면서 "당시 경계부대는 미식별 물체를 탐지한 후 처음부터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추적 감시했다"고 말했음.
- 북한 주민의 집단 탈북이 잇따르자 식량난 등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체제 이완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음. 북한은 이번 귀순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 악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北 "주민 즉시 송환 않으면 남북관계 악영향"(6/16)

- 북측이 지난 11일 귀순한 북한 주민 9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음. 통일부는 1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혔음.
- 북측의 전통문은 이날 낮 12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접수됐음. 북측은 이들 주민이 타고 온 선박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음.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귀순의사니 뭐니 하면서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음. 북측이 귀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송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자유의사 따라 처리"..北에 통지(6/17)

- 지난 11일 서해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탈북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소식통은 17일 "두 가족 9명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귀순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출발해 밤새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말했음. 북한 주민 9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인도될 당시부터 귀순의사를 밝혔고 성인 남성들이 노동자 출신인 점도 치밀한 사전 준비설을 뒷받침함.
- 어부가 아닌 일반 노동자 출신 성인이 포함된 북한 주민이 2척의 소형 선박(전마선)을 이용해 남측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귀순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임.
- 정부는 또 북측이 귀순자 9명의 송환을 요구해온 데 대해 이날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음. 전통문에는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북한 주민 9명은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외교 21일 訪美..뉴욕 거쳐 워싱턴 방문(6/17)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에 앞서 21일부터 3일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뉴욕 방문기간 하인스 워드 미국 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 미식축구 선수를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 (Goodwill Ambassador for KORUS Future Vision)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토마스 허버드 이사장과 마크 민튼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 지도부와 면담하고 동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 김 장관은 코리아소사이어티 지도부와 면담에서 미국 내 대(對) 한국 인식 제고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을 위한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의 뉴욕 방문기간인 21일 유엔 총회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면담과 행사 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김 장관은 이어 24일 워싱턴 D.C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지역적·범세계적 관심사안을 폭넓게 협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은 주요 행정부 인사, 의회 중진의원, 학계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임. 김 장관은 26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 美상원, '주한미군 가족동반 확대' 제동(6/19)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각) 전해졌음.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후텐마 기지 등 일본 내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의 재검토도 주문했음.
- 군사위는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의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이런 권고안을 지난 16일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권고안은 육군장관이 미 의회에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제공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자금투입을 금지토록 하며, 대안도 검토해 보도록 했음.
- 그동안 상당수 주한미군은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한국에 복무해 왔음. 이에 따라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 차원에서 가족을 한국에 동반한 상태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복무정상화 계획이 추진돼 왔음.



- 권고안은 북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요구하면서도 "군사위원회는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문구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켰음.

● **주한미군 2명, 전주 음식점에 소화액 뿌려(6/19)**

-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영업을 끝난 음식점에 소화액을 뿌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미군 2명이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앞 모 즉석음식점 바닥에 흰 소화액을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 당시 음식점은 영업이 끝난 상태로 근무자나 손님은 없었고, 건너편 건물 앞에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2명이 앉아 있었음.
- 경찰은 2명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화액 살포 여부를 물었지만,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음. 하지만, 경찰은 즉석음식점과 인근의 CCTV를 통해 이들이 소화액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범인으로 특정,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음.
- 범인으로 특정된 미군 2명은 군산에 있는 미군 제8전투비행단에 소속된 L모(20), M모(21) 이병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임.

● **<한·미, 개발원조 손 맞잡는다>(6/19)**

- 한미 양국이 개발원조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에 나선.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개발원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번 MOU에는 양국 개발협력 사업 집행기관의 수장인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라즈 샤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처장도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은 앞으로 서부 사하라 이남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을 비롯해 저개발국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개발원조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방침임. 이를 위해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발원조 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 중복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조율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원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해 해외 원조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면서 "원조사업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우리나라는 호주·덴마크와 개발원조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과도 연 1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원조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김두관 경남지사, 中선양서 투자 설명회(6/13)

- 중국을 방문 중인 김두관 경남지사가 13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음. 김 지사가 이끄는 경남도 투자유치단은 이날 낮 12시 선양 성마오(盛貿)호텔에서 선양 한인회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200여 명을 초청, 경남의 기업 환경과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음.
-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남권과 남해안선 경제벨트의 중심에 있는 경남은 변화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번영 1번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선과 기계, 항공우주, 첨단장비 산업의 거점인 경남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음.
- 김 지사 일행은 이날 저녁에는 선양 조선족기업가협회 소속 기업인들을 초청,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음. 경남도 투자유치단은 이날 선양지역 기업들도 방문, 기업 간 교류와 합작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음.
- 김 지사 일행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선양에 도착해 랴오닝성을 방문, 천정가오(陳政高) 성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14일에는 하얼빈(哈爾濱)으로 이동,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를 참관한 뒤 15일 귀국함.

다. 한·일 관계

● '독도 영유권' 日 교과서 일반인에 공개(6/13)

-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 전시회'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됨.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독도 사진과 영상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2기 '독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음.
- 독도 전시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4월4일~5월21일 전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기 전시회가 열렸음.
- '우리땅 독도가 들려주는 이야기전, 독도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도 위치, 지명 변화, 독도 관련 문헌, 독도를 지킨 인물, 독도 생태계, 각종 자원, 주민 발자취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 지도 등이 소개됨.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검정·통과시킨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7종, 역사 7종)이 공개되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한 지도 등도 별도 전시됨.
- 또 문화해설사나 독도 전문가들이 관람객과 현장을 돌며 독도에 대해 설명해주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독도사랑 글짓기대회'(6월7일~6월30일)도 열림.
- 교과부는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



토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독도 전시회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제3기 전시회는 9월 23일~10월18일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제4기 전시회는 11월15일~12월16일 광주민속박물관에서 열림.

● 이천시, 日 지진으로 파손된 석탑 반환 요구(6/17)

- 일본 도쿄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이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부 파손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시가 일본 측에 반환을 요구했음. 조병돈 이천시장은 17일 오후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에 있는 석탑을 직접 확인한 결과 4, 5층 탑신과 옥개석이 25cm 정도 균열된 상태였다"며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참에 석탑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한병일 한국문화보존연구원장은 "오쿠라슈코칸 측은 지진이 난 지 3개월 이상 지났지만, 가림막을 쳐놓은 것 말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듯 했다"며 "공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오쿠라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조 시장 등은 이날 오전 도쿄 오쿠라슈코칸 이사장을 만나 석탑 반환과 파손 상태 공동 조사 등을 요구했음. 조 시장은 "오쿠라슈코칸 측이 오늘 협상에서 (이천이 다른 물건을 주고 이천오층석탑을 환수하는 형식의) '물물교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말했음. 기자회견에는 조 시장과 한 원장 외에 조명호 이천 문화원장, 박창희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실무위원장 등도 참석했음.
- 이천오층석탑은 1918년 경기도 이천 향교에서 일본으로 반출됐고, 평양 울리사 터에서 반출된 고려시대의 팔각오층석탑과 함께 오쿠라슈코칸 뒤뜰에서 있음.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부 파손된 사실이 5월말에 한국에 알려졌음.

● 韓日 400명 "식민지배 정당화 교과서 반대"(6/17)

-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교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17일 오후 6시30분께 도쿄 도시마(豊島)구 도시마공회당에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이 주최한 '이쿠호샤(育鵬社)·자유사(自由社) 교과서 반대 집회'에는 일본 시민 400여명과 한국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자유사는 "일한병합(한국강제병합)은 일본의 자랑"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교과서를 출판한 회사이고, 이쿠호샤는 과거 새역모 교과서를 펴내던 후소샤(扶桑社)의 후신임.
- 앞서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도쿄 스기나미(杉並)구와 요코하마(横浜)시의 주민들은 "교과서 선택 권한이 있는 교육위원들이 모두 보수·우익 인사들뿐이어서 또 한 번 자유사 등의 교과서가 채택될 공산이 크다"며 "어떻게든 이를 막고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일본 정부는 3월말 지유사와 이쿠호샤 등 7개 회사가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음. 지유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안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보호국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기술이 포함돼있음. 8월에는 각 지구별 교육 위원들이 내년 4월부터 4년간 해당 지역에서 가르칠 교과서를 선택함.

라. 미·중 관계

● 베트남 '징병령'..中 '美 개입 말라' 경고(6/15)

- 베트남이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는 14일 전시 징병 기준을 정한 징병령에 서명했다고 명보(明報), 문화보(文匯報) 등 홍콩 신문들이 15일 베트남 신문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징병령은 전면적인 군대 동원령은 아니지만 공무원, 독자 등 전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라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베트남이 징병령을 발동한 것은 지난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32년 만에 처음임.
-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이달 말 필리핀에 이어 다음 달 베트남과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을 겨냥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서로 담판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타당하게 분쟁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 특히 그는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짐 웹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남해 문제를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비당사국은 반드시 당사국 간의 담판 노력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中, 클린턴 '신식민주의' 발언에 강한 반발(6/15)

-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겨냥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신(新)식민주의' 발언에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이 문제의 발언에 거부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변 연구소의 연구원이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국을 이간질하지 마라"고 주장했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를 공문화했음.
- 중국 사회과학원의 허원핑(何文平)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은 15일 신화통신에 "클린턴 장관의 신식민주의 주장은 역사적 증거와 포괄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결여됐다"며 "미국은 중국·아프리카 간 관계를 냉전적 시각으로 보려한다"고 비난했음.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에 대해 중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발언은 클린턴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잠비아를 방문



- 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이용만 하고 이익 실현에만 골몰하는 신식민주의를 아프리카 나라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한데 대한 반응임.
- 허 소장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석유 가운데 아프리카산이 지난 2006년에는 16%였으나 2015년에는 25%로 늘 것이고 미국의 석유회사인 엑손 모빌은 미국으로만 수출하기 위해 차드에서 여타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막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탐하는 쪽은 되레 미국이라는 주장을 폈음.
 - 그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석유는 미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도 했음. 그는 아울러 중국이 저가상품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시장을 유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 보호지원에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허 소장은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절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발전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고 역설했음.
 - 그는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후 110년을 식민주의로 신음한 나라로 그 고통을 절감하고, 식민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돕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2006년 아프리카 방문 당시 "중국에 신식민주의의 모자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음.
 - 이에 앞서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신식민주의 발언에 언급, "중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침략을 겪은 나라들로 평등과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중국은 아프리카를 충분히 존중 한다"며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에 어떤 정치적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中 시진핑·美 바이든 전화 회담..현안 논의(6/17)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16일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지난 1월 중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대화 강화, 교류 및 협력,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처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가자"고 강조했다.
- 바이든 부통령도 시 부주석의 언급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중 관계보다 더 중요한 양자관계는 없다고 역설했음.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대(對) 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가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 중·일 관계

● 〈中日, 동중국해 공해에서 신경전〉(6/17)

- 중국과 일본이 지난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두고 대립한 데 이어 올해는 오키나와(沖繩) 공해상에서 신경전을 벌였음.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일본 자위대가 공해를 지나가는 중국 함정에 근접해 정찰했다며 "위험하다"고 항의했음.
- 중국은 4월2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 부근 공해를 통과하는 중국 함정에 접근해 비행했다고 주장했음. 이 헬리콥터는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탑재 호위함에 실려 있었음.
- 중국은 또 일본 항공자위대의 해상초계기인 P3C1기가 중국 함정 부근을 저공비행했고, 일본 측 P3C2기가 또 다른 중국 함정 부근 고도 80m를 선회 비행하면서 음파탐지기 부표(소노부이)를 연속 투하했다고 덧붙였다. 음파탐지기 부표는 잠수함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됨.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에게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활발한 정찰 활동 탓에 중일 간에 충돌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음. 이에 대해 일본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측은 미사일 탑재 호위함은 문제가 된 해역에 없었고, P3C기는 중국 함정과 3천700m 거리를 뒀고, 소노부이도 중국 함정에서 1천300m 떨어진 곳에 투하했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타자와 방위상도 량 국방부장에게 "중국 측에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레이더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음.

바. 중·러 관계

● 中·러,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6/17)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음.
- 나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후 주석은 1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하고서 이같이 밝혔음. 후 주석은 양국이 평등, 상호 신뢰 및 지지, 공동번영 속에서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자고 강조했다.
- 후 주석은 이어 이날 열린 중·러 선린우호조약체결 1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양국이 지난 10년간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뒀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했으며, 국제문제에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강화돼 왔다"고 평가했음.
- 후 주석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에서의 공조로 세계 평화와 안전, 안보는 물론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 두 정상은 아울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줄이는 것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음.
- 두 정상은 또 중동 지역에서의 시위와 정세불안을 언급, "외부의 힘은 그 지역(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음.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은 법적인 토양에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